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

-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 ☑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개인예산제 등) 요구 활동
-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 ☑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5.1.17. _ Vol.451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학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2024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5 장애계 활동과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상반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고 장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공약들이 입법 과정에서 속속히 등장하며 장애인 정책에 동력을 더하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장애인 지원 확대,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 정책 마련 등 장애계에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연대했던 2024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 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5년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소개한다.



01 장애계 5대 활동과제

장애계 활동 과제 선정 배경

■ 매년 장애계 정책 활동 과제 선정, 현안 중심의 활동 적극 진행

-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전국 30여 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음
- 매년 장애계가 추진할 공동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장애인단체, 언론 및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2009년~2014년 10대 정책 활동 과제 선정, 2015년부터 5대 정책 활동 과제 선정

■ 장애인단체의 핵심 역할인 연대와 대안 마련

- 장애인 문제는 개인 및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정책의제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평가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의 제기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도 개선과 권익증진을 달성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과 활동 전개가 필요함



2024 장애계 정책 활동 주요 추진 성과

-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년 차를 맞이하여, 해당 계획의 초기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의 방향성을 구체화해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음. 특히, 고령화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시점이었음
- 장애계는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2024년 정책과제 의견수렴 및 정책 실현 전략 구체화, 모든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촉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 장애인과 소수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음
- 특히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둔 개인예산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이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세미나와 장애계 교류 대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계의 연대와 협력이 돋보인 한 해였음



02

2024년 장애인 주요 추진과제 성과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장애인 계층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비율이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 증가¹하였고, 의료 및 복지서비스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장애인은 안전 및 차별 방지와 같은 기본적 권리에서 낮은 보장 수준을 보이며, 의료기관에서의 부족한 서비스와 장애 친화적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 권리 또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²
-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됨. 고령장애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제도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임

- ➔ 장애인 고령화의 개념 및 연령기준 마련
- ➔ 활동지원사각지대(65세 이후 등록장애인)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 추진 경과

- '24.02.02.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고령장애인 정책과제(안) 의견수렴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학회 연합 춘계학술대회(2024.05.3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05.31. 한국장애인복지학회·한국장애학회 연합 춘계학술대회 '장애인의 건강권' 개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주최)
- : 실천분과 '장애노인지원체계의 현실과 과제', 발달장애분과 '발달장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실천현장의 도전과제' 세션 진행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2024.07.0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07.09.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4.04.

2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09.

- '론회' 개최(최보운, 서미화 의원실 공동주최)
- '24.07.22. '인생경력 65플러스, 장애와 함께 유쾌하게 살아가기'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 445호)



장애인정책리포트 445호(2024.07.2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08.21.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참여(최보운 의원실 주최)



중고령 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2024.08.21.)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24.10.3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노인장기요양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기회 보장요청' 건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핵심 성과

- 2025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안전(안) 도출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정책과제(안)를 발굴함. 또한,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장애인단체,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한 결과, 2025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이 안전으로 상정 예정(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향후 과제와 전망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의 정착과 서비스별 지원 확대 촉진

: 고령장애인 지원 법적 근거 강화, 지자체 고령장애인 지원 서비스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필요에 따른 분야별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협력 활동 추진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포용법안(박성중,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이 되었지만 [임기 만료폐기] 되었음. 제22대 국회에서는 6월 고동진 의원, 8월 박민규 의원, 9월 김장경 의원이 디지털포용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국민·전지역 인공지능·디지털 활용·확산을 위해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2024년 부처추진계획³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이 흐름에 따라 「디지털포용법」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신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정책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함

- ➔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고, 디지털 기술 및 기기(멀티미디어·OTT) 정보접근성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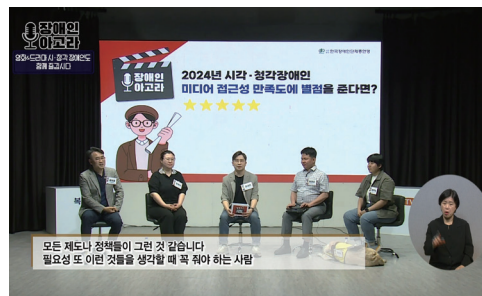
■ 추진 경과

- '24.04.15. '장애인의 영화(榮華)로운 영화(映畫)생활을 위하여'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 4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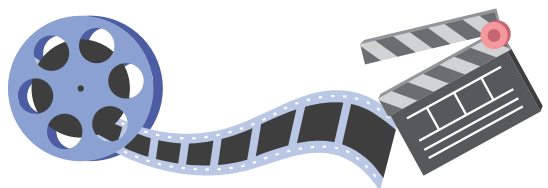
장애인정책리포트 442호(2024.04.1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06.29.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영화·드라마, 시각·청각장애인도 함께 즐길시다' 방영 : 시·청각장애 당사자와 장애인방송물 제작사업 관계자 간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드라마 환경(OTT 등) 논의



제2회 장애인 아고라(2024.06.2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0.07.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TFT) 회의 진행 : 제22대 국회 「디지털포용법」 발의·제정을 위한 이슈화 활동 논의(정책세미나 등)
- '24.10.29.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



3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

세미나 개최(최보운, 서미화 의원실 공동주최)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2024.10.2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1.2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시각장애인 도서 플랫폼 제공 전자책 뷰어 접근성 보장요청' 건의(에스이십사(주), (주)교보문고, (주)알라딘 커뮤니케이션, 리디(주), (주)밀리의서재)
: 도서 플랫폼 유통사마다 전자책 뷰어가 상이하여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24.12.18. '장애청소년,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다 :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과 과제'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 450호)



장애인정책리포트 450호(2024.12.18.)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핵심 성과

-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 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본격화
: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촉구, 장애포괄적 디지털 정책마련 필요성 공론화
-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기반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3건의 제정법률안과 4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심사를 거쳐 「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의결(2024.12.26.)⁴

■ 향후 과제와 전망

-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 정부는 디지털포용법 시행(2026년 1월 예정)에 대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위법령 및 행정 규칙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시행(2025.06.)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포괄적 디지털정책과 관련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적극적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현안 점검 및 개선 요구

4 [보도자료]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개인예산제 등)

요구 활동

■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당사자의 욕구와 의견을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개인예산제는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된 뒤,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도 2026년 본 사업화를 목표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정비와 정책 실행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지향점 제안과 지속적 정책 요구 활동 등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 시행 및 확대
- ➔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참여



■ 추진 경과

- '24.01.31.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의료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발간(장애인 정책리포트 439호)



장애인정책리포트 439호(2024.01.3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0.15.~16.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는가' 개최
- : 기조강연 '우리나라 사회보장 속 장애인의 선택권 현실과 과제'(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세션1 '정책 소비자로서 장애인, 가능하려면?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황과 한계' 등 세션 진행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2024.10.15.~1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1.22.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 '지역사회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 개최

: 기조강연 및 라운드테이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하다'(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센터장) 등 세션 진행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성장과정 II (2024.11.26.~27.)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2024.10.2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2.05. '사회양극화 타개를 위한 사회복지사 현장 간담회' 참여(국무총리비서실 주최)

: 지역사회통합돌봄 이슈 등 참가단체 분야별 현안 논의

- '24.11.26.~27. 장애인단체 중간관리자 대상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UpSchool(업스쿨) 성장과정II '장애인을 위한 지역돌봄통합지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개최

: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과제' (돌봄과미래 조경애 사무처장,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 대표) 등 강의 진행

- '24.11.29.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최보운, 서미화 의원실 공동주최)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2024.11.2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2.12.~13. '제2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내 집에서 맞는 나의 노년' 개최

: 기조강연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과제'(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 정책점검 '돌봄통합지원법 :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돌봄 체계'(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현안점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한 돌봄정책'(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등 세션 진행



제2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2024.12.12.~13.)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1.13~12.24.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 회의 진행(7회)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2024.11.13.~12.2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핵심 성과

- 장애인 개별화 지원체계 구축 이슈 공론화
- : 장애관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젠다와 개인예산제 실질적 추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장애인의 개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을 제안하였음. 또한, 장애인 돌봄 등 개별 지원에 있어 법적 및 정책적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이슈 공론화
- 장애인 개별 지원 실현을 위한 법적·정책적 방

향 설정

: 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 운영 등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 분야 하위법령 검토 초안 마련, 법적·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며 장애인 개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와 협력 지속 전개

■ 향후 과제와 전망

- 장애인 욕구 기반의 법제화와 개별화 지원체계 구축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에 적절히 반영하고, 개인예산제와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이 연계되어 장애인의 개별화된 욕구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폭넓게 진행,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실행 과제 도출 및 정책개선 활동 추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활동지원서비스 및 동료지원서비스와 같은 지원 체계의 존재를 알지 못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태조사⁵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88.4%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행 서비스종합조사가 신체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신장애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급여시간 부족과 활동지원사 배치 미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도 절반 이

5 2023년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02.

상을 차지해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동료지원서비스와 절차보조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매우 낮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과 주거지 부족이 꼽히는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도움 제공 주체로 가족 의존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 ➔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 요구
- ➔ 정신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 및 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 '24.03.~05. 2024총선장애인연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연대 10대 과제 공약 포함 이슈화
- '24.05.24.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바라는 아침은?'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 443호)



장애인정책리포트 443호(2024.05.2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08.20.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병원 치료환경을 개선하라!' 성명서 발표('정신병원개혁연대' 참여)
- '24.08.26.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격리강박 사망사건의 공범이 될 것인가' 성명서 발표('정신병원개혁연대' 참여)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2024.08.23.)
© 비마이너

- '24.09.06.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는 있는가' 개최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장애인 법안 제·개정 이슈 종합적 검토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2024.09.26.)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핵심 성과

-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 현행법 한계 분석 및 법적 기반 필요성, 정책 요구사항 이슈화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과의 연대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10대 공약 과제에 포함된 정신장애인의 권리 강화 및 정책 요구사항을 이슈화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의 제·개정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논의 촉진 및 관심 도모

■ 향후 과제와 전망

-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지속 촉구

: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17개 시·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낮 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 신설, 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 제도개선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개선 요구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

■ 활동배경 및 주요 과제

- 소수장애인은 장애 유형의 특성과 낮은 인구 비율로 인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기존의 보편적 지원체계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의료·교육·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특히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접근성과 맞춤형 지원 부족이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중복·회귀 장애와 같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미비한 상황

이며, 장애유형별 요구를 반영한 세분화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소수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이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 ➔ 소수장애 복지욕구 조사 및 정책수립 기초연구
- ➔ 소수장애 유형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서비스 마련

■ 추진 경과

- '24.03.~05. 2024총선장애인연대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소수·내부 장애인' 공약 포함 이슈화

- '24.06.20. '함께 알아야 할 이야기, 속 터지는 내 부기관 장애인의 현실'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 444호)

※ 제19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2024.07.30.) 개최 시 신장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신체내부기관장애인 돌봄의 필요성 및 서비스 지원 방안 체계 마련' 주제 세션 진행 연계, 장애인정책리포트 444호 현장 배포



장애인정책리포트 444호(2024.06.2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09.0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관련단체 논의 및 검토의견 회신 (허영, 권칠승, 안상훈 의원실)



난청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 간담회(2024.11.2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4.11.21. 난청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핵심 성과

- 소수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 협력 추진
- : '속 터지는 내부기관 장애인의 현실'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국내 심포지엄 및 대회를 통해 소수장애인의 복지와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정책 논의를 활성화함. 또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교류와 관련 의원실 협력을 통해 소수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개선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협력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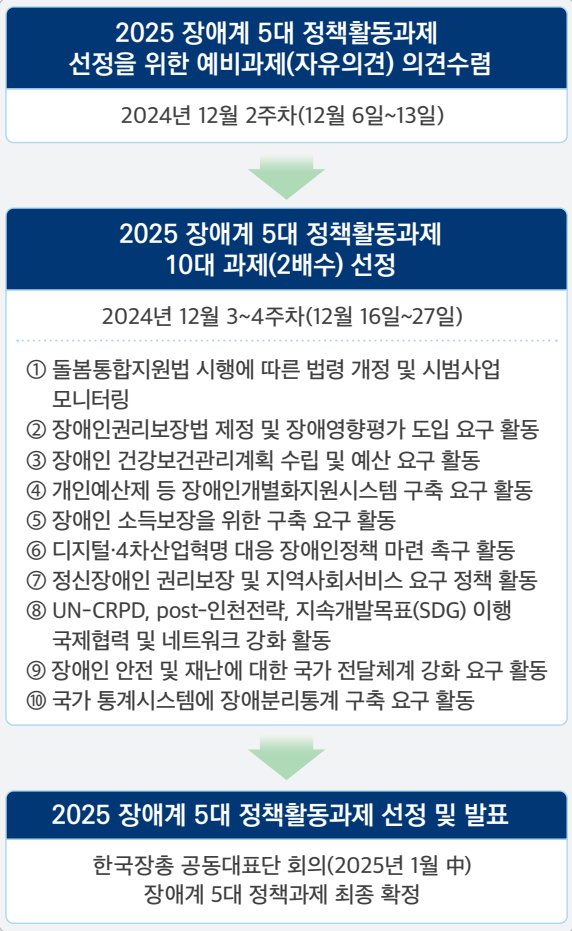
향후 과제와 전망

- 소수장애인 맞춤형 정책 기반 구축 및 실질적 지원 확대
- : 소수장애인 복지 욕구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복지 욕구 조사와 정책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중복·희귀 장애 등의 소수장애인들도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세분화된 서비스와 지원책을 마련하며, 해당 과제를 반영한 법률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03 2025년 장애계 활동 과제

2025 장애계 활동 과제 선정 과정





2025 장애계 활동 과제(안)

※ 최종 선정된 '2025 장애계 5대 정책활동과제'는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예정

구분	정책과제(안) 및 주요 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장애인 분야 법령 개정사항 점검 - 지자체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의견 제출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활동 (주거서비스 등 장애유형 및 서비스별 지원정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 법령, 정책, 예산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법제화 촉구, 장애포괄 국가정책 추진 위한 환경 구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건강보건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정비 요구 활동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검진기관 구축, 의료비 지원 확대 - 특별운송수단 확대를 통한 장애인 진료 및 병원이송 시스템 확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제 등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요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본사업 시행('26) 대비 정책 마련 요구 - 장애유형 및 욕구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장애등급제 폐지 후속조치 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구축 요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소득 등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요구 - 근로지원인 제도개선 및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서비스 확충, 정책 모니터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정보단말기, 디지털교과서, 디지털 기술 및 기기(멀티미디어·OTT) 정보접근성 구축 - 디지털포용법, 시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책 모니터링, 제도개선 요구활동

구분	정책과제(안) 및 주요 내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 - 동료지원센터 확충, 동료지원인 양성 도입 등 - 정신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 및 시스템 구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CRPD, post-인천전략, 지속개발목표(SDG) 이행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건해 이행 강화 요구 활동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심의 대응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국제협력 활동 - Global Disability Summit 2025 (독일) 참가 활동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체계 강화 요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신설 및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재난대피훈련 의무화, 재난피해 통계 수집·생산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통계시스템에 장애분리통계 구축 요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애 인구 조사 추진 - 주류 실태조사에서의 장애분리통계 생산 강화 - 장애특화통계의 생산체계 점검 및 효율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장애통계 생산 강화

2025 장애계 정책 활동 주요 추진방향

-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장애계는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임. 특히,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와 의료·돌봄 통합지원(돌봄통합지원법)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 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더불어 주요 장애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별, 장애유형별, 직능별로 장애인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부 정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월간 **한국장총** www.kofdo.kr

발행일 2025년 1월 17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제보하세요!

이동 · 편의, 문화 · 체육 · 관광, 인권, 고용, 교육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건을 **제보** 받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홈페이지 : www.kofdo.kr

대표전화 : 02-783-0067



사단
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